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정부의
4000명 의사 증원이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

첫번째..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와
중증 필수의료에 인력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답이 빠져있다



서울에 집을 가졌느냐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나라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것은 의사 뿐만이 아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이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답이다.

중증필수의료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고되고 힘들고 위험한데 보상마저 적은 상황에서
이들이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누가 비난할 것인가.

정부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싶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두번째..

의대를 입학할 때부터
진로를 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실습하고 의사면허를 따고
다시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받고 심지어는 전문의로서
세부전공을 연마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진로탐색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이다.

**그런데 의대를 입학할 때부터
기피 필수중증의료분야로 전공을 정해놓는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흉부외과, 소아외과, 중증외상외과 등을
전공하는 의사가 되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거다.

세번째..

지역이나 전공을 법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가 수련병원을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전공, 배우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느냐가 우선이 된다.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곳. 그래서 주로 수도권의 대형병원이 선호된다.
원하는 과목을 전공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살던 의사가
기꺼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의사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해야하는 의사가
하고 싶은 전공이나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어도 복무 의무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것은 분명한 부당한 불이익일 가능성이 있다.

네번째..

현실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없는 제도
이기 때문이다.



다른 의사들과 동일 또는 거의 비슷한 교육과 시험을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했는데 근무지역과 전공과목을 제한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면허를 박탈, 취소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는 법적인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4천명의 의사는 사실상 정부의 의도와 달리
개인적인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이고
지방이나 필수의료분야, 연구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쉬운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은
오직 의사와 국민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쉬운 길을 택했다.
그 성패는 적어도 10~20년은 지나야 평가할 수 있으니
부담도 없을 것이다.
실패하더라도 추진한 사람들 중 누구도 책임질 일이 없다.

오직 당사자인 의사와 그 의사들이 치료할 환자들만이
실패한 정책의 영향을 고스란히 몸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4000명 의사 증원이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이다**